
UEA 2026 Chicago 출장보고서

2026. 10. 13.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1 출장 배경 및 목적

- ☐ (출장 배경) 출장자의 연구논문 “Where to Build New Cities: Optimal Urban Land Supply and Korea’s New Town Projects”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학술적 피드백을 통해 논문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출장 목적) 논문의 유관 분야인 공간경제 및 국제무역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및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교류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美 일리노이 주 시카고
- 출장기간: 09/24 (목) ~9/28 (월) (한국시각)

☐ 출장자 (총 1명)

소속	성명	직위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김 선 합	부연구위원

☐ 주요활동

-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거시경제·국제무역·공간경제 최신 연구 주제 등을 습득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일정(안)
09/24 (목)	[출국] 인천 → 시카고(KE037) 시카고 입국 후 근처 숙소 체크인

09/25 (금)	<p>세션 “Building Cities, Villages, and Data Centers”에서 논문 발표 및 Chair</p> <p>세션 Urban Theory, Economic Geography, Optimal Spatial Policy 참석</p> <p>점심 간담회: Farid Farrokhi (Boston College), David Jinkins (Copenhagen Business School), Sungwan Hong (University of Pittsburg)</p>
09/26 (토)	<p>세션 Housing Dynamics, Agglomeration and Knowledge, Trade I 참석</p> <p>아침 간담회: Eunjee Kwon (University of Cincinnati)</p>
09/27 (일) ~ 09/28 (월)	[입국] 시카고 → 인천 (KE038)

4 활동 내용

□ 국내외 학자들과 상호 의견 교환 및 연구 교류

- Mohamed Bahlali (Aix-Marseille University)와 공간 동학 모형의 평균장게임(mean-field game) 접근 논의. 본 연구는 연속 공간·시간에서 노동자가 이동 비용과 개별 충격을 고려해 이주를 결정하는 동태적 공간 모형을 평균장게임으로 정식화함. 모형은 이중 구조로, 정태적 층위(무역·집적 모형)가 임금과 물가를 결정하고 그 위에서 미래 임금을 예상하는 노동자가 이주함. 연속 공간에서 정태적 균형의 존재성·유일성을 호모토피 논증으로 처음 증명하였고, 이를 이용해 동태적 균형의 존재성을 증명함. 다만 Krugman 모형처럼 집적의 힘이 지배적이면 균형의 유일성은 성립하지 않음. 이 때 공간 집중도(허핀달-허시만 지수)의 변화를 개별 충격(분산), 근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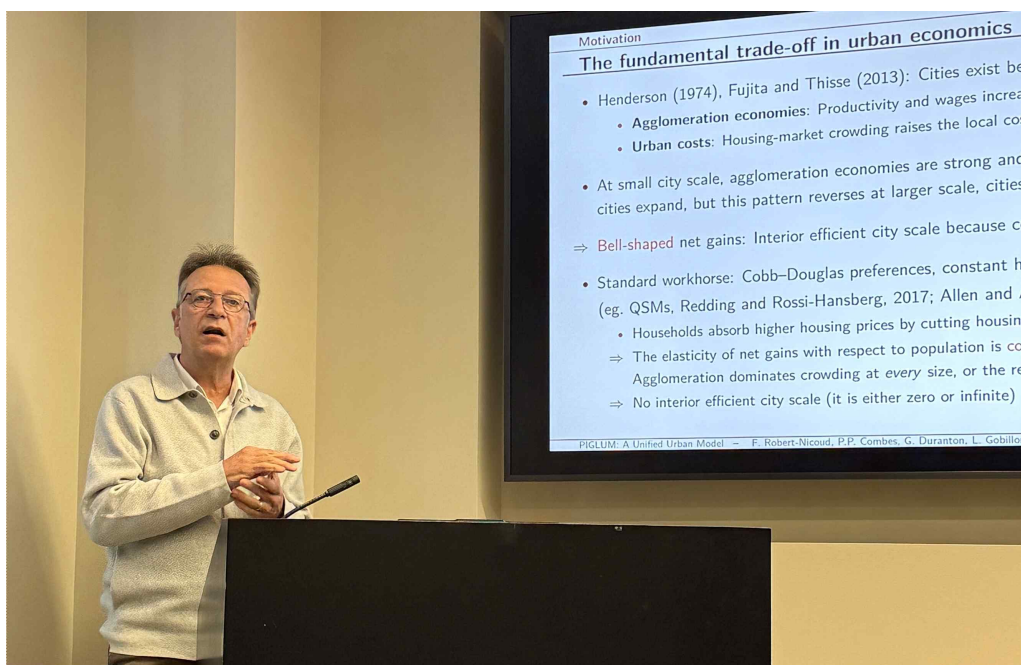
적 조정(집적), 불확실성 대응(분산), 미래 기대(집적)의 네 요인으로 분해함. 그 결과 합리적 기대는 정태 모형과 무관하게 항상 집적을 강화하나, 근시안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패턴(집적 또는 분산)을 뒤집지는 못함. 이는 순수 이론 연구로 실증 분석은 포함하지 않으며, 모형 상의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에 의해 이주가 인접 지역으로만 이루어지는 점은 한계로 언급함.

- 해당 연구는 인구 이동에 대한 기대가 공간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여, 수도권 집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다만 기대는 정태적 유인이 정하는 지배적 방향을 뒤집지 못함. 이 함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신도시·혁신도시 등 분산 정책의 성패는 정책 발표에 따른 기대 형성보다 비수도권의 실질임금 여건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Pierre-Philippe Combes (Sciences Po)와 비동조적(non-homothetic) 주거 수요를 반영한 통합 도시 모형 논의. 기존 도시 모형은 소득·가격에 반응하는 주거 수요, 0으로 퇴화하지 않는 도시 규모, 관측되는 도시 체계를 동시에 설명하지 못함. 콥-더글러스 선호는 주거 수요의 소득·가격탄력성을 모두 1로 두어 효율적 도시 규모가 0으로 퇴화하고, 주거 소비를 고정한 모형은 소득효과를 살리는 대신 가격효과를 배제함. 본 연구는 주거를 필수재로 두는 선호(PIGL)와 토지 및 투입재화로 경쟁적으로 생산되는 주거 부문을 결합한 모형(PIGL-UM)을 제시함. 소득효과로 인해 도시 생활비가 임금보다 인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집적 탄력성과 주거 공급 탄력성의 곱이 1보다 작으면 유일한 내부 효율 도시 규모가 존재함. 프랑스와 미국 자료의 기존 추정치(주거 수요의 소득탄력성 0.7~0.8, 주거 공급 탄력성 2 등)는

이 조건에 부합함. 도시 특성, 입지 선호, 근로자 능력이 이질적인 경우로 확장하면 도시 규모 분포가 파레토 또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라 지프의 법칙(Zipf's law)을 재현할 수 있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가 큰 도시에 집중하는 sorting이 나타남. 또한 통근비용과 내생적 토지 이용을 포함한 단핵 도시 모형(PIGL-AMM)이 PIGL-UM과 정확히 동형(isomorphic)임을 보여, 도시 내부 구조까지 단일 틀로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함.

- 해당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과 가용 토지가 클수록 효율적 도시 규모가 커지고, 주거 공급 탄력성이 낮을수록 생산성 증가에 대한 도시 규모의 반응이 작아짐을 보여 국내 주택시장과 도시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택지 공급과 건축·토지이용 규제 완화가 도시 규모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틀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통근비용과 규제에 따른 주택가격·인구밀도 변화 분석은 신도시 입지와 도시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함.



논문 “A Unified Urban Model With Non-Homothetic Housing Demand”을 발표하는 Combes Science Po 교수

- Joao Guerreiro (UCLA,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와 외국인 거주자 유입에 대한 최적 정책 논의. 본 연구는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글로벌 도시에서 지역 주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분석함. 리스본의 2011~21년 자료(인구총조사, 관광 통계, 온라인 주택 매물 등)는 외국인·관광객의 대규모 유입, 도심 주택 재고의 소폭 감소, 실질 임대료(41%)와 주택가격(25%)의 상승, 내국인의 도심 이탈, 통근 시간 증가를 보여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심과 외곽으로 구성된 공간 모형을 구축하고, 정보 제약을 두는 Mirrlees 식의 최적 정책을 도출함. 외국인 유입은 지역 주민에게 주택 자본이득(외국인 거주자 잉여)을 주나, 집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혼잡과 소득 불평등을 키울 수 있음. 최적 정책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주거지·근무지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세금과 이전지출을 설계하는 것임. 반면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과세·보조·제한이나 용도지역 규제(zoning)는 최적이지 않음. 외국인이 지역 어메니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정책의 입국 수수료가 정당화됨. 장기적으로는 도심 사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고 생산 기능은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향이 최적인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외국인 주택 구입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문제시되나,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 및 외국인 유입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해당 연구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보다 지역 주민 대상의 이전지출과 도심 토지이용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 국내 주택시장과 도시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서울 등 대도시에서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을 검토할 때, 규제 자체보다 자본이득 환수와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심 업무시설의 주거 전환 등 용도조정은 별도 규제보다 시장 유인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음.

- Stephen Redding (Princeton University)의 기초연설을 통해 수량도시경제모형(quantitative urban models)의 최근 연구 동향 청취. 이 접근법은 도시 내부의 직장·거주지 선택, 토지 이용, 교통망을 다수의 비대칭 입지로 구현하여 블록 단위의 미시자료와 직접 연결됨. 소수의 구조 모수(탄력성)만 추정하면, 관측된 토지가격·고용·거주 분포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입지별 생산성과 어메니티를 역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교통망 개선이나 규제변경이 공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반사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연설에서는 이 모형의 적용 사례로 세 가지가 소개됨.

- 첫째는 베를린 분단과 통일을 이용한 집적효과 추정임. 분단으로 서베를린의 일부 지역이 인접한 고용·거주 밀집지에 대한 접근성을 잃으면서 분단 전 중심업무지구 인근의 지가가 가장 크게 하락했고, 중심업무지구 기능은 쿠담(Kudamm) 일대로 옮겨 갔음. 통일 이후에는 옛 중심지가 다시 지가 정점으로 부상함. 이 변화를 입지의 자연적 조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생산성의 고용밀도 탄력성 0.07, 어메니티의 거주밀도 탄력성 0.15 수준의 집적효과 탄력성 반영해야 관측치를 재현할 수 있음. 두 외부효과는 이 동시간 10분 안팎에서 거의 소멸하여 매우 국지적임.
- 둘째는 19세기 런던의 철도망 사례임. 1836년 증기 여객철도 개통 이후 런던 시티의 거주인구는 1851년부터 1921년까지 약 90% 감소했으나 대런던 인구는 2.69백만 명에서 7.39백만 명으로 증가함. 철도가 직

장과 주거지의 분리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며, 통근 거리는 초기 철도 시대의 5km 이내에서 20세기 초 20km까지 늘어남. 철도망을 제거하는 반사실 분석에서는 가정에 따라 1921년 대런던 인구가 13.7~51.5% 감소하며, 철도 건설비 대비 토지·건물 가치 증가분의 비율은 1을 크게 상회함. 주택 공급의 탄력성과 집적효과를 반영할수록 철도의 효과가 커져, 교통인프라 투자 평가에서 이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임.

- 셋째는 재택근무가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임. 재택근무는 통근비용 하락으로 해석되며, 도심에서 교외로 수요가 이동하는 도넛 효과와 도심 사무용 부동산 수요 감소가 관찰됨. 도심 사무 공간이 주거로 전환될 여지가 있으나, 전환 비용과 용도지역 규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연구는 교통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주택·토지 공급과 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나타남을 보여, 국내 도시계획과 광역교통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량적 접근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개발, 도심 업무시설의 주거 전환 등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를 소지역 단위에서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기반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함. 특히 집적의 외부효과가 짧은 이동 범위에서 작동하므로 거점 개발과 밀도 계획은 역세권 등 접근성이 높은 소지역을 단위로 설계해야 함.
-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음.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인구 이동과 주택 공급 반응, 집적 효과를 거쳐 편익이 입지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파급 경로를 반영하여 편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계량 도시경제 모형은 정책 시행 전후의 공간 분포를 반사실적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지가와 후생의 변화로 환산하여 사업비와 대응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함. 따라서 기존 비용편익분석이 이러한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점검하고, 분석 단위도 보다 소지역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집적효과 탄력성(agglomeration elasticity), 주택 공급 탄력성(housing supply elasticity), 통근비용 등 공간모형의 핵심 모수를 국내 소지역 자료로 추정하는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앞으로 관련 자료 구축과 모형 개발을 확대해 정책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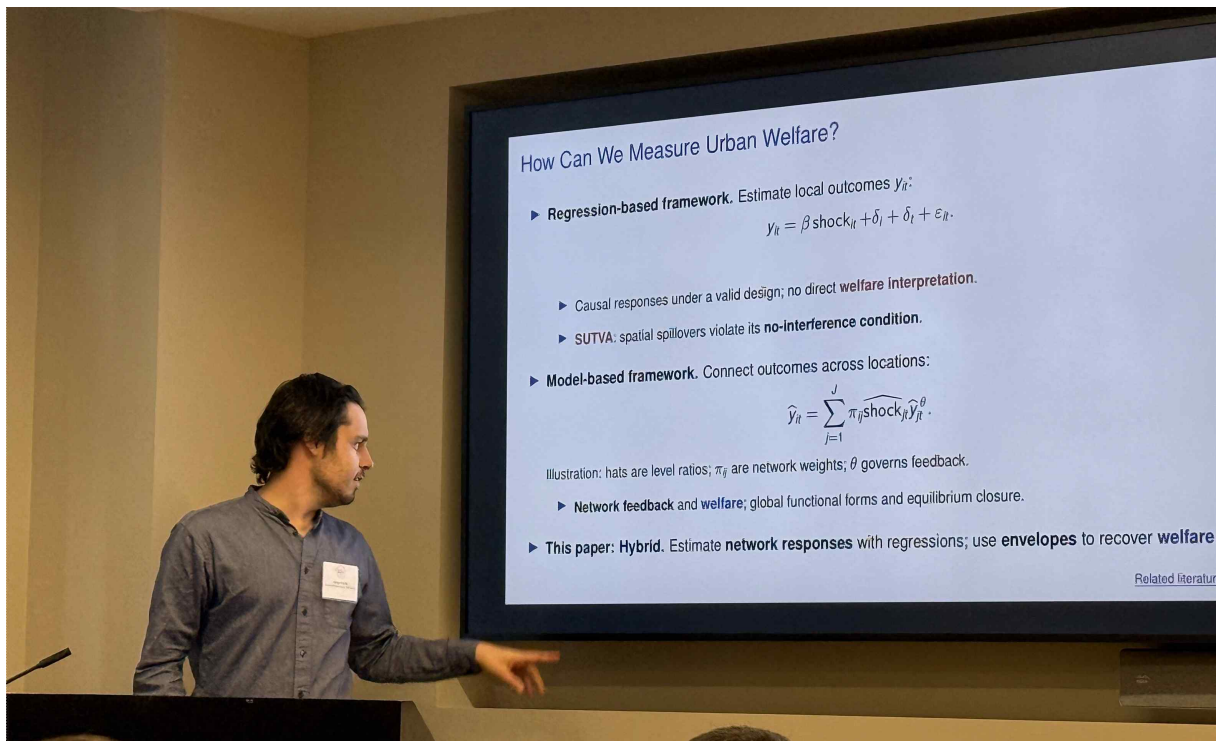


“Quantitative Urban Economics”를 주제로 기조연설 중인 Stephen Redding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Simon Fuchs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와 관광이 도시 거주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논의. 본 연구는 도시 내 특정 지역의 수요 충격이 주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한의 모형 가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바르셀로나의 관광 지출에 적용함. 기존 회귀분석은 지역 간 일반균형 파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구조 모형은 가정에 의존하며 결과의 해석이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이론에서 도출한 회귀식을 사용함. 포락선 정리(envelope theorem)에 따라 주민 후생 변화는 통근과 소비 비중으로 가중한 소득 변화와 물가 변화로 표현되고, 시장청산 조건을 교란하면 한 지역의 수요 충격이 다른 지역의 가격과 소득으로 전파되는 경로가 도출됨. 자료는 현지 은행(CaixaBank)의 카드·판매시점 거래(연 1.65억 건 이상, 전체 지출의 약 54%)와 급여 계좌를 이용해 1,095개 소지역의 소비·소득·통근 네트워크를 2017~19년 월별로 구축함. 관광객의 출신국별로 방문 시기와 소비 장소가 다른 점을 이용한 shift-share 도구변수로 인과 효과를 식별함. 일반균형 파급을 반영하면 관광 지출은 지역 물가와 소득을 유의하게 높이며, 가격 효과는 해당 지역의 직접 지출보다 다른 지역에서 전파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1월에서 7월로 이어지는 계절적 관광 증가(바르셀로나는 연중 증가 폭이 약 200%)의 평균 주민 후생 효과는 파급을 반영하면 +1.8%, 반영하지 않으면 -1.4%여서, 파급을 무시하면 관광의 편익이 과소평가됨. 후생 효과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상이하였음.

- 해당 연구는 관광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수요 충격의 후생 효과를 지역 간 파급까지 포함해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 국내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정책의 평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관광객 유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해당 지역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인접 지역으로의 소득·물가 파급과 거주 지

역별 분배 효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관광 집중 지역에서 오버투어리즘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주민 후생에 대한 실증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소지역 단위의 소비·소득·통근 자료와 관광객 출신별 지출 자료가 필요하므로, 국내 카드 거래와 이동통신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단기 효과에 한정된 추정이므로 임대료 상승 등 주거비 문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함.



논문 "Urban Welfare: Tourism in Barcelona"를 발표하는 Simon Fuchs (FRB Atlanta)

- David Jenkins (Copenhagen Business School)와 공공주택이 도시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논의.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와 공간적 양상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함. 덴마크 개인 단위 패널자료 (1986~2016년)와 1996년 코펜하겐시의 공공 소유 임대주

택 매각(19,000호 이상, 시 주택 재고의 약 7~8%)을 준 실험으로 활용함. 매각이 이루어진 동네는 이후 10년간 주택가격이 약 17% 상승하고, 고학력 거주자 비중이 2.5%p, 평균소득이 약 12% 높아지는 반면 아동 수는 약 6% 감소함. 또한 공공주택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은 많고 식당, 일반의, 초등학교는 적게 나타나, 공공주택의 배분이 지역 상업·서비스 구성과도 연결됨을 보임. 이를 해석하기 위해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이 공존하고, 공공주택은 대기 순번 등 비가격 방식으로 배분되며, 소비 어메니티가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동태적 계량 도시 모형을 구축하여 덴마크 자료로 추정함. 반사실 분석 결과, 공공주택을 전부 민간주택으로 전환하면 코펜하겐 도심과 외곽의 임대료 비율이 29% 상승함. 공공주택 전량을 부유한 외곽 지자체(Gentofte)로 옮기는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됨. 두 경우 모두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도심에서 밀려나고 최고소득 가구의 도심 비중은 커지며, 식당이 도심으로 집중됨. 연구진은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균형 가격과 어메니티를 바꿔 도시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음.

- 해당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입지가 취약 계층 주거 지원을 넘어 지역의 가격, 계층 구성, 상업·서비스 구성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보여, 국내 주택시장과 도시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공공임대 공급 계획과 기존 단지의 매각·재건축 전환을 검토할 때 입주자 편익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과 계층 변화까지 일반균형 관점에서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임대를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입지 배분은 주거 지원 목표와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

하여 설계해야 함. 다만 덴마크는 주택시장 내 공공 주택 비중이 약 20%이고 비영리 주택조합 중심의 대기자 명단 방식으로 배분되는 사례이므로, 이 결과의 함의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이러한 분석에는 개인 단위 행정자료와 준실험적 정책 변화가 결합되어야 하며, 국내 자료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Daniel O'Connor (University of Michigan)와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지역 노동시장이 경제지리와 최적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해 논의함. 해당 연구는 대기업 한 곳의 충격이 지역 노동시장 전체의 충격이 되는 상황(granularity)에서 노동시장 풀링(labor market pooling)이 집적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임. 기업 수가 적은 시장에서는 생산성이 오른 기업이 노동자를 다른 부문에서 끌어오지 못해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임금만 올리지만, 기업이 많은 시장에서는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어 평균 임금이 시장 규모와 함께 상승함. 이 효과는 시장이 충분히 커지면 소멸하며, 기업이 진입 시 자신의 임금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균형에서 진입이 과소하다는 규범적 함의도 도출됨. 일본 제조업 사업체 자료(2002~2019년, 225개 통근권)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의 고용 반응은 지역 노동시장 내 비중이 클수록 작아 이론과 부합함. 이 기제가 설명하는 임금의 인구 탄력성은 가장 작은 통근권에서 0.0074, 도쿄에서 0.0009이며, 추정된 집적 외부효과 중 소규모 통근권에서는 15~37%, 도쿄에서는 2~4%를 설명함. 최적 정책은 소규모 지역에 대한 기업 진입 보조이며, 기업 수가 가장 작은 지역에서 3.4% 늘고 인구는 약 0.5% 증가함. 기업이 노동시장은 경쟁구조에 따라서는 진입 보조보다 임금 보조가 적절할 수 있고,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과잉 진

입이 나타남. 다만 도시 임금 프리미엄의 대부분은 다른
기제에서 비롯되며, 일본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므로, 결
과는 선진국에 대한 하한으로 해석됨.

- 해당 연구는 소수 대기업에 고용이 집중된 지방 소
도시의 노동시장 구조가 지역 생산성과 기업 진입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국내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산
업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됨. 소규모 지역
에서는 기업 진입이 사회적 최적에 못 미치므로 기
업 유치와 지원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으나, 추정된 최적 보조의 규모는 크지 않아 정책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라 최적 수단
이 진입 보조인지 임금 보조인지가 달라지므로, 정책
설계 이전에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집중도와 기업
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
단위 자료로 국내 노동시장의 대체탄력성과 기업 규
모 분포를 추정하는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출장자의 발표 논문에 대해 연구 발전방안 논의

○ 기존 연구에서 공간적 자원배분 왜곡(spatial
misallocation)의 주된 이유로 주택시장 및 주택공급 관련 규
제를 지목하였고, 고생산성 도시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민경제 후생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함. 본 논문은 토지공급에
비용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고생산성 도시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우리나라 2기 신도
시에 적용하여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공급했어야 한다
는 수량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 본 연구가 도시경제를 주제로 하면서도 거시경제 관련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조세 등 후생경제적 함의를
가진 가정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논문의 함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Harrison Mitchell,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특히 정부의 예산제약에서 세입 관련 가정의 누진도 및 지주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를 보완할 경우 후생경제학적 논의가 풍부해질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음.

□ 간담회

- 9/25 (금) 점심 간담회 (Farid Farrokhi (Boston College), David Jinkins (Copenhagen Business School), Sungwan Hong (University of Pittsburgh)). 무역, 공간경제, 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들과 각자의 최근 연구 주제 및 관련 분야 연구 동향을 공유함. 무역과 공간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지역 간 교역과 노동 이동이 지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논의함. 또한 환경 규제와 산업·인구 입지 변화의 상호작용 등 환경과 공간 구조를 연계하는 연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한국의 행정자료와 지역 단위 자료로 이러한 모형을 적용할 가능성을 소개하고,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함.

- 9/25 (금) 아침 간담회 (Eunjee Kwon, University of Cincinnati). 한국의 지역별 쾌적도(amenity)를 소지역 단위로 추정하는 방안을 상세히 논의함. 쾌적도는 직접 관측하기 어려워 구조 모형에서 관측된 거주 분포와 지가·임대료로부터 역산하는 방식이 표준적이거나, 한국에서 이를 읍면동 등 소지역 수준으로 추정한 연구는 드문 편임. 이에 행정자료와 카드거래, 통신사 이동자료 등 소지역 자료로 입지별 쾌적도를 추정하고, 이를 생활 서비스 시설, 교통 접근성, 자연환경 등 관측 가능한 요인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함. 또한 쾌적도가 거주자 구성에 따라 내생적으로 변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생적 정책 변화를 식별에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함. 추정된 쾌적도는 다양한 공간경제 연구 및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지역 자료 구축과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함.